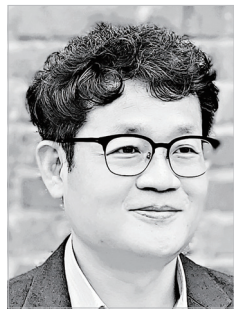


특별기고

광주 동구관광 기틀이 지역관광의 기둥



임석

동구예술여행센터장

광주 동구 관광의 기틀이 광주 관광의 기둥이다.

2021년 한해를 뒤 돌아 보면 광주 동구는 관광을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관광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들이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지자체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관광으로 중무장할 것이고 동구 또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광주가 관광시장 안에서 자리 잡기에는

지금 이 최적기라고 생각되기에 홍보 마케팅을 광주 동구가 추진해왔다.

홍보 마케팅 최적기

지난 10여년을 돌아보면 신규 자연관광지들은 자리를 잡고 인기를 얻고 있는 반면 도심관광지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해 관광에 발을 들인 대구광역시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 내·외국인들이 함께 찾아 즐길 수 있는 도시는 대한민국에 몇 곳 되지 않기에 관광지로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광주의 5개구는 각 구의 실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만들어 내고, 시는 5개구의 사업이 연계돼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지속성을 보장한 관광정책을 수립해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과연 광주는 관광시장에서 연착륙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버리고 지금은 기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매력도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홍보·마케팅에 주력할 시간이다.

한해 동구의 진행사업들을 살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들이지만 이 기본적인 사업들을 충실히 실행하면 성과들이 나오는 많은 경험을 통해 체득한 바가 있다.

진행했던 대표적인 사업들과 성과는, 첫째 '광주 동구 관광의 빛 들다' 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관광진흥 계획을 추진했다. 목표 설정은 지속적인 사업실행과 자립을 위한 기본 작업으로 관광에 대한 동구의 첫걸음이다.

둘째는 전문가들의 팸투어였다. 대상은 여행전문기자, 여행작가, 여행사로 광주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관광자원의 다양성을 확실하게 각인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광주가 추구하는 예술관광의 기대감과 숨어있는 관광자원의 가치를 확인하며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에 알릴 수 있었다.

셋째 실력은 국내 전문여행사들 18곳을 선정해 동구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동구 여행상품 기획 및 판매에 실질

적 관광객들이 광주 동구로 유입되며 만족도 높은 동구의 관광을 알리며 재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 관광객 유치 목표를 영남지역으로 선정, 대구관광재단, 울산 중구청과 관광활성화 협약을 맺고 실질적 상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류를 시작했다.

도심관광 중심지 기대

특히 대구에서 출발해 광주 동구를 둘러 보는 광역 달빛시티투어를 운영, 광주 관광을 소개해 대구 시민들의 만족도와 호감도를 높여 왔으며 대구관광재단 또한 광주출발 대구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며 실질적 상호 교류 발전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들을 통해 확인된 것은 동구에 집중 설치된 폴리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가치와 만족도는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예술관광으로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펼쳐 보일 중요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대구가 중구 근대골목을 시작으로 관광시장에 자리매김 했듯 광주는 원도심 동구의 관광자원과 더불어 추진되고 있는 빛의 분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야간관광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더불어 광주는 대한민국 도심관광의 중심지로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기고

정당 내 공천시스템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박철수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1년이 되는 해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험난한 여정 끝에 30년 만인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시민 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난 2021년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였고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본격 시행된다.

특히 올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

방선거로 인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제 지방의회 공무원들은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임명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 권한을 갖게 된다. 지자체 집행부와 분리된 자체 인사위를 꾸려 지방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 명시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제는 지방자치 1.0시대에서 자치분권 2.0시대로 전환되는 자치분권의 환경 변화에 맞는 실력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하다.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정당 내 공천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각 정당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높아진 만큼 '준비되고 실력있는 정치신인' 들을 발굴하고 여성·청년 등 다양한 인재들이 지역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선거추진·원팀선거, 지방선거 지원단' (이하 지원단) 활동을 주목하고 있다. 시민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지방선거는 대선 못 지 않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과 코로나 19로 인해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관행적인 공천시스템으로는 후보들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선거 보다는 조직선거, 즉 돈 선거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 지원단에서는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정보공유, 출마예정자 정책발표, 지역 현안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정책역량의 준비정도를 시민과 당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 지역발전 공약 공모, 청년신인 등 인재 공모 등을 통해 지역위원장 중심의 정당공천 구조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거'를 지향하며 활동하고 있다.

더 이상 지방선거가 후보자들 간의 물밑 출혈경쟁이나 소수의 알만한 사람들끼리 짜고 치는 판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보다 공개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시민의 참여와 선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거의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나주화순 지역위원회의 정당공천 혁신실험이 꼭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넘는 시점에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 공천시스템의 과감한 혁신과 함께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시민과 함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가 되길 희망한다.

특지광장

설, 우리 농축산물로 가족사랑 나누자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명절이 곧 다가온다. 새해를 맞이해 가족들과 친지를 찾아 함께 조상을 생각하고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며,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정성스러운 선물을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설 문화는 소중한 미풍양속이다.

우리는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한다. 해가 바뀌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첫 날인 '설'을 할 때마다 떡국을 먹는 풍습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로 여겨지는 것인데, '설'이 사람의 나이를 해어리는 단위로 정착해 오늘 날 '설'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한다.

떡은 곡식가루를 시루에 찌거나, 찌서 치거나, 물에 삶거나, 빻아서 찌는 음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성례(백일·돌·혼례·장례·제례)를 비롯하여 주요 명절(설날·추석) 등에 다양한 떡을 만들고 나눠 먹는다.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거치는 각종 의례와 행사 때마다 만들어 함께 나눠 먹는 음식으로 '정(情), 나눔과 배려'의 상징이며, 공동체의 화합을 매개하는 중요한 음식이다. 떡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무형적 자산이다.

이처럼 '떡 만들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향유되고 있

다는 점, 삼국시대부터 각종 고문헌에서 떡 제조방법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점, 지역별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떡의 제조가 활발한 점, 현재에도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하여 떡을 만드는 전통 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정부는 2021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러한 떡의 주 재료인 쌀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약 388만톤 생산돼 2020년 약 351만톤 대비 약 10% 증가했다. 이는 최근 6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작년 벼가 자라고 익는 여름과 가을의 기상 여건이 좋아서라고

한다.

그런데 농민들은 풍년이 들어 기쁘지만 설을 앞두고 근심이 깊다.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은 설과 추석 명절이 최대 성수기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설날에 만남이 줄어들고 비대면 문화로 바뀌고 있어 설 명절의 대표 음식인 떡국과 차례용 및 선물용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떡국용 떡, 육류, 과일, 인삼 등 다양하고 실속 있는 선물세트 준비에 여념이 없는 우리 농민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우리 전통 미풍양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동구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사설

전남 가축방역관 부족 해결책 모색해야

전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살처분과 함께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가축방역관 인력이 부족해 방역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가축 방역관은 수의사 출신의 공무원으로 전염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의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은 179명이지만 현재 102명뿐으로 많이 부족하다. 목포·곡성 등 5개 지역은 가축방역관이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사육 가축은 945만 마리에 이른다. 가축방역관을 채용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수의사를 일반직(수의선방안)을 중앙부처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AI가 발병해 전남지역 농가 30만 6,000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됐다. 2020~2021년에는 381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보상비로만 1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가축사육 농가와 가축 수를 기준

으로 가축방역관이 배치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해 수의사 인원 보강이 어려운 것이다.

농림식품부는 1998년부터 6년제 수의과대학으로 개편된 이후 과제로 남아 있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대우를 잘해주는 수의직 공직자가 늘어날 것 아닌가. 지난 2018년부터 처우개선을 위해 '차지단체 가축 방역관 인사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사태는 풀리지 않고 있다.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가축방역관을 5급으로 승격하고, 의료활동 수당 등 처우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축방역관이 꼭 필요하다. 가축방역 체계를 바로 세우려면 가축방역관의 처우부터 개선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전환 특위' 광주 미래 여는 주춧돌

광주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광주대전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린-스마트-펀(Fun) 도시'로의 실행 계획을 준비 중이다. 광주대전환 특별위원회는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기구다. 한 달여 전 이용섭 시장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TF(태스크포스팀)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태동, 이번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특위는 환경과 생태, 인공지능(AI), 산업, 문화, 관광 분야 전문가 등 총 3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의 임무는 한마디로 광주의 세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는 데 맞춰져 있다. 다르게 말하면 광주 도시흐름의 전환 전략이다. 그동안 사회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일신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중심 도시를 꾸꾸는 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그리고 밝고 즐거운 도시를 만

드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내놓아야 한다. 특위 위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3명이 20~40대인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시민들은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만큼 미래 100년 대비를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 100년은 말 그대로의 의미도 있겠지만 다가올 미래의 상징성을 표현한 것으로 광주가 풍요롭고 윤택하게 발전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필수적이란 의미다.

광주시는 녹색산업도시를 만드는 '그린시티', AI로 대변되는 '스마트 시티'를 표방하고 있으며 여기에 불거리와 줄길거리, 먹거리 등 문화예술과 관광을 접목한 '펀시티'에 방점을 찍고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대전환 특위에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선보여 광주의 미래 운명을 바꾸어갔으면 한다.

순천시의 '의회 패싱'

기지사첩

순천시의회는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권력분립과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마저 무시하는 순천시의 독단적 '의회 패싱'이 극에 달한 탓이다.

최근 해고 절차상의 부당함을 호소했던 순천만국가정원 44명의 노동자가 복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10명을 감축해 81명으로 운영하려 했던 애초 계획이 121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예산도 15억 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순천시는 수정된 인력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인력변동에 따른 예산을 승인받은 후 복직을 통고해야 했다. 하지만 허석 순천시장의 일회자로 서명까지 한 협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회 예산 승인' 절차는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됐다. '의회 패싱' 결과 증원된 인원의 임금이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이유로 당분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순천시가 50%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원의 처리를 놓고는 전직 공무원이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 순천시의회를 능욕하기도 했다. 순천시가 먼저 결정하거나 집행한 이후 순천시의회 승인을 요구한 경우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권동현

전남취재본부 차장

시장에서 어떤 경우에도 절차는 지켜져야 하고 물리적인 폭력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집행부의 권한이 강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약한 기형적인 제도라고는 하나 순천시의 '의회 패싱'은 도를 넘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 하나가 권력분립이다. 중앙 권력을 삼권으로 나누는 것도 불완전 중양정부와 지방정부로 다시 한번 수직적 권력분립을 꾀한다. 지방정부 또한 의결기관과 집행

기관으로 나뉘었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시민은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수레의 양 바퀴처럼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순천시가 순천시의회를 또 다른 한 축으로 존중하고 협의하며 순천시의 발전을 꾀하는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social welfare.

Table for 전남매일 (Jeonnam Daily)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